

“日, 국제기구 조사 함께 받자”

‘전략물자 밀수출’ 주장에… 韓 “문제 없으면 일본, 수출 규제 철회하고 사과해야”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일본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하자 정부가 공정한 국제기구의 조사를 함께 받고 일본에 제언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조사 결과 우리 정부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 하에 해상 불법항적 활동도 철저히 단속해왔다”며 “실제로 지난 2년 간 우리는 3국 중에서 유일하게 불법항적의 의심되는 선박 총 6척을 최대 1년 반 이상 억류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유엔 제재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 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

제해 왔다”며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법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동결해 제발 방지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간 150여 건 적발해 대외 공개한 것은 우리 정부가 수출통제규범을 철저히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차장은 “4대 수출통제 체제 하에서 대부분 가입국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사례를 대외공개하고 있다”며 “일본도 그런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에 보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

우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에서 우리의 수출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지만 일본은 밝히지 않고 계속 주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나 적절한 기관에 한일 양국의 위반 사례를 놓고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답변이 없을 경우 단독으로 국제기구에 조사를 의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그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일본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방향들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시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총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민주-평화,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환영’

민주 - “성숙한 노사 합의 정신 돋보여”

평화 - “적정 수준 결정… 속도조절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여야 2당이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2.87%(859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한 데 대해 “표결로 결정되기는 했으나 역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를 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협사 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며 “또 각계의 속도

조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자급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평화당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적정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 2년 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며 “그러나 자영업자와 영세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년 대비 2.9% 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시스

지역문학 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

도의회 나인권 의원, ‘전북 문학진흥 조례안’ 발의 문학관 등록 필요 절차·운영 활성화 지원내용 등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은 (갑제2)이 전북 문학진흥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이번 366회 도의회 임시회에

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 지역의 문학은 풍부한 전통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장르 중 하나로 간주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문학 진흥을 위한 전북도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문학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등록문학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사립문학관의 등록절차 규정은 민간 부문의 문학관 설립과 운영을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문학 진흥을 위한 자료조사 및 연구와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은 문학진흥 거점시설로서 문학관의 제 역할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학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발의한 나 의원은 “근현대를 관통해온 전북도의 지역문학사는 한국 문학의 부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북의 문학진흥을 다시 세우고 지역문학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택시 월급제’ 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출퇴근 카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가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을 금지된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기로 했다.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6월 임시국회 회의는 오는 19일까지다. /뉴스시스

이 총리 “해군, ‘가짜 지수’ 참 못난 사람… 엄중 조치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해군에서 부대 내 탄약고에 접근한 거동 수상자(거수자)를 놓치고 장교가 병사에게 거짓 자백을 증명한 사건에 대해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조깅을 했는지 누군가 어떤 상태로 지나가서 수하를 했는데 (거수자가) 불응했다고 한다. 자기 근무영역을 지키다보니까 도주자들

못 잡은 상황”이라며 “영관급 장교가 자기 부하 직원들이 고생할까 봐 가짜 지수를 시킨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해서 바로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수자가) 무장상태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 상태였다고 한다”며 “지금 조사 중이라서 제가 아는 것을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거수자가 발견된 장소가 해군2함대 사령부 무기고 부근이라고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그 위치도 보고받았다”며 “그런데 그 사람(거수자)이 지나가고 수하에 불응했던 장소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뉴스시스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권
전라북도 고창군